

##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배포일 : 2024.10.10. (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02-784-5750

#### 독도 실시간영상과 관련한 10월 1일자 국민일보 보도( “ ‘독도영상관’ 文정부 때도 80건 철거...野도 독도 지우기?” )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음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료된 독도영상관 80건 중 민간의 후원기간 종료로 철거된 43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7건이 종료되었으며, 같은 기간 57건이 신규설치되었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 독도영상관이 20건 늘었다고 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독도 실시간영상관이 신규설치된 국공립기관 30개 중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화문 세종박물관, 제주독도체험관 등 주요 국공립기관들 다수 포함됨

▲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독도관은, 독도영상 문제 이외에도 친일적 역사관을 지닌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요 국가기관의 장들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 독도방위훈련을 역대급 소규모로 줄인 사실 등등 많은 사례에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친일적 편향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일보는 2024년 10월 1일자 “ ‘독도영상관’ 文정부 때도 80건 철거...野도 독도 지우기?”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가 80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며, 문재인정부와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독도 지우기의 전력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음.

그러나 위 국민일보 보도는 사실의 일부만 보도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음.

## 1. 문재인 정부의 독도 실시간영상관 종료 및 신규설치 건수

○ 국민일보 보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독도 실시간영상관 종료가 80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으나,

국민일보는 ① 문재인 정부 동안 80건의 종료 건수 중에서 후원기간 종료에 의해 철회된 건이 43건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국민일보는 ② 문재인 정부 동안 신규설치된 독도 실시간영상관이 57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음.

###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료된 건수

장소	종료 건수	종료 사유
각급 학교	66건	후원기간 종료 43건 그 외는 계약기간 종료
지자체 및 국공립기관	14건	계약기간 종료
합계	80건	

### ■ 문재인 정부 기간 신규설치된 건수

장소	신규설치 건수	비고
각급 학교	26건	
지자체 및 국공립기관	30건	동북아역사재단 등*
민간 법인	1건	금호어울림
합계	57건	

\* 동북아역사재단,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화문 세종박물관, 제주독도체험관, 충무교육원 등 다수 국공립기관들 신규설치

○ KBS가 제작송출하는 독도 실시간영상은 지자체나 국공립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계약해 영상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의 후원에 의해 학교나 국공립기관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음.

이렇게 후원에 의해 영상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후원이 영구적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후원하기로 정했던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영상관이 철거되는 것임.

문재인 정부 동안 종료되었던 80건 중에는 이렇게 후원기간 종료에 의한 경우가 중 43건이나 있었던 것임. 즉 후원기간 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등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는 실제로는 37건임.

○ 한편 ②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독도 실시간영상관이 신규설치된 건수는 57건에 이름. 그 중 각급 학교에 26건이 신규설치되었고, 국공립기관들에 30건이 신규설치되었음.

○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료된 80건 중 후원기간 종료 43건을 제외하면 기관 자체적인 판단으로 종료한 건수는 37건이고, 같은 기간 동안 신규설치된 경우는 57건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영상관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건이 더 늘었던 것임.

## 2. 문재인 정부 동안 독도 실시간영상관을 신규설치한 주요 국공립기관

○ 국민일보 보도에 나온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된 독도 실시간영상관은 80건인데, 그 중 각급 학교는 66건임. 경상경비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학교의 경우 후원에 의

해 영상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량이 있는 있는 국공립기관들이 종료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함.

○ 반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독도 실시간영상관이 신규설치된 경우들을 보면, 학교는 26건이지만 국공립기관은 30건에 달함. 그 30건의 국공립기관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화문 세종박물관, 제주독도체험관 등 의미있는 중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국민일보 보도는 이러한 사실도 누락하고 있음

3.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일적 역사관과 독도관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은 우선, 친일적 역사관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연달아 임명하고 있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남.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를 옹호하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하하며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김낙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박지향), 독립기념관장(김형석)에 임명함.<sup>1)</sup> 이 중 한국학

1)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반일종족주의 저자.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식민지근대화론 옹호. 과거사 사죄를 일본의 젊은세대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안익태, 백선엽)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발언. 흥범도 흥상 육사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 (임시정부 계승은)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

중앙연구원장 김낙년은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심지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음.

또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발을 하는 김태효가 안보실 1차장으로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음.

○ 2024년 5월 20일, 서울교통공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기시다 일본총리가 26일에 방한하기 직전에 광화문역의 독도조형물을 철거했음.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광화문역의 독도조형물을 시민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음.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거짓이 명백함.

2024년 6월초에는 전쟁기념관이 2012년부터 전시해온 독도조형물을 철거했음. 전쟁기념관의 존재이유와 상징성에 비추어 전쟁기념관에서 12년 넘게 있었던 독도조형물을 철거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이유일 수 없고 의도적인 철거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2024년 10월 2일, 성남시의회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일치하여 ‘독도지킴이 축구 결의안’을 반대하여 부결시킨 사실,

군 정신전력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있는 곳으로 기술한 사실,

2024년에는 독도방위훈련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이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부랴부랴 독도방위훈련 계획을 급조해서 훈련 실시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급으로 최소 규모로 훈련한 사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 소관의 무려 51개나 되는 기관들에서 독도영상관을 일거에 철거한 사실,

---

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

국가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사람이 쓴 근  
현대사 서적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 속의 모든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사실 등등,

윤석열정부의 독도지우기 사례들이 우연이 아니라 친일적 역사관과 독도관에서 비롯된  
일관되고 조직적 현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들이 넘치고 있음.

## 5. 결론

국민일보의 보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독도 영상관 철거가 정치적 배경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들이었음을 왜곡했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영상관 설치가 늘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독도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뚜렷한 정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음.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할 것임.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